

## 막을 수 있는 죽음, 빈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7-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홍정 총무) 언론위원회(임순혜 위원장)는 2019년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으로 ‘막을 수 있는 죽음, 빈곤’을 선정했다.

###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서울 성북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노모 7씨와 40대 딸 3명이 지난 11월2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들 모녀의 집 우편함에는 채무 이행 통지서 등 갚아야 할 채무가 여러 건 들어있었고, 딸들이 자영업에 실패하면서 생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을 찾는 친인척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자 장례절차를 의뢰했고, 이들은 시민들이 만든 추모위원회의 노제를 받으며, ‘살아서 서럽고 고단했던’ 서울을 떠났다.

서울 봉천동에서는 탈북모자가 지난 7월31일 통장 잔액 0원인 채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두 사람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언론이 보도하듯 ‘아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일할 수 없었던 엄마 한모씨가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견뎌야 했을 막막함과 외로움, 혹은 아들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어떻게 견뎌왔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배고픔과 가난을 피해 온 대한민국은 가난과 무기력을 증명하지 않는 한, 굶어죽을 수 밖에 없는 곳이었다.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6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에 시달리며 사회적 단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돕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막을 수 있었던’ 빈곤으로 굶어죽거나 홀로 남겨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성북동 네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 29개 지표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었다. 만일 이들이 공과금을 내지 못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청에 통보되지만, 네 모녀 가구는 체납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장례비용에 써달라고 마지막 남은 가산을 흰봉투에 넣고 떠나기까지 꼬박꼬박 공과금과 빚을 갚으려 애썼던 송파 세모녀처럼 성북동 네모녀도 마지막까지 한국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애아들을 둔 봉천동 엄마 한모씨도 통장에 0원이 남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가난과 싸웠다. 탈북하면서 이혼했고, 당장 살아갈 방법이 망막했지만 한모씨는 이혼과 가난을 증명할 수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 29개 지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성북동 70대 어머니와 둘째 딸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수준인 1만3100원 정도로 소득과 재

산이 거의 없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그런데 이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된 3개월째 쯤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셋째 딸은 쇼핑몰을 운영했고 첫째 딸은 이 쇼핑몰에서 함께 일했지만, 이 사업장도 지난 7월부터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네 모녀는 2016년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14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해 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못했다. 성북동 네 모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극한의 고통과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급격한 빈곤화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될 수 없었다. 또 다른 길은 가난을 증명하는 것이다. 29개 지표에 미달하지만, 스스로 가난을 증명한다면,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그 어디엔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수익이 있다면, 복지지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징적인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난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사회적 타살'

옛 모압 땅에 살던 이스라엘 여성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둘째 며느리 룯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효성이 지극한 룯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전통(고엘)에 따라 일꾼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밭의 주인은 친척인 보아스였고, 이를 안 나오미의 지혜덕분에 보아스와 룯은 재혼하여, 훗날 예수의 조상인 다윗의 선조를 낳았다. 고엘은 가난한 이웃, 과부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는 행위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을 헤치지 않는다. 추수하는 밭에서 일꾼들이 이삭을 남겨두거나 일부러 떨어뜨려서, 낱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 고엘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자 사회적 출구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일같이 방송에 등장하는 후원금 모금 광고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굶주린 아이는 가난을 구구절절 증명해야 하고,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정부군에 겁탈 당한 소녀는 성폭행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빼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와 특이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를 앓고 있는 미혼모는 사이버 구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도 자선단체도 송파 세모녀도 봉천동 모자도 성북동 네모녀는 구하지 못했다. 그곳엔 사회적 '고엘'도, 행정적 '고엘'도 작동하지 않았다. 모금액은 쌓여서 자선단체 창고에 쌓이고,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창고에 쌓여갈 뿐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1월4일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 세출은 293조원으로 세계잉여금 69조원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했으나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 못했거나 쓰지 않은 돈이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창고에 쌓이는 돈이다. 이렇게하여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쌓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잉여금은 91%, 순세계잉여금은 116%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창고에 쌓이는 '순세계잉여금'만큼 내수경제는 악화되고, 주민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는 사각지대를 양산해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당해연도에 4천500억원 증가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 데 쓰였다면 지난해 GDP가 약 31조원 증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 GDP 규모의 1.7%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복지예산에 쓰여질 수 있었던 '순세계잉여금'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광역단체는 16조2천억원으로 세출 대비 10.9%를 차지했으나 기초단체는 세출의 36.3%에 해당하는 52조5천억원이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광역단체는 9조1천억원(세출 대비 비율 6.1%), 기초단체는 25조9천억원(17.9%)이었다. 일부 기초단체 중 20곳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의 3분의 1을 넘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과천시(82.1%), 안산시(56.7%), 시흥시(52.4%), 서울 강남구(51.9%), 전남 무안군(51.8%) 순이었다. 다만 과천시와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일회성 분양수입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이기는 했다. 가난을 증명하도록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스템은 고스란히 '순세계잉여금'을 창고에 쌓이고, 가난한 이들은 무연고자가 되어 떠나는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금을 복지사각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고엘로 쓸 수 있다. 부유한 이들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신의 부를 증명하거나 예외적 상황을 기꺼이 증명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왜 내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아무런 심리적 상처 없이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렵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다. 그곳에 행정적 '고엘'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창(義倉)과 사창(社倉)을 열어야 한다.

###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죽음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때로 정치적 행위에 희생된다. 봉천동 모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회통합'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착금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온 계획경제사회와 전혀 다른 무한경쟁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 남기 위한 생존능력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정주민인 이웃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까지 철저하게 관리 받는 대상으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이러한 낙인이 곧바로 아주 특별한 이주에 대한 '고엘'로 보상받지는 못한다. 오히려 철저하게 적자생존을 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그곳에 봉천동 모자가 있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찾기도 어려웠다. 오직 나의 가난을 증명하도록 행정기관도 통일부도 그리고 종교단체마저 요구하고 있었다.

봉천동 모자 사망 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인권 등 북한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내세웠던 단체들 대표들이 장례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북한 인권을 위한 정치활동을 해 온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혐오를 양산해온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이라는 엽기적 시위를 벌이고, 국정원 댓글부대로 활동하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해 '3000명 망명선언'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장례식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반복활동과 남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다행히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봉천동 모자 장례식을 둘러싼 기이한 주장은 탈북단체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16일 통일부는 봉천동 모자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탈북민 입국 후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탈북민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

29개 검증지표'와 유사한 기준과 관료주의만 양산할 뿐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선입견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고엘'이다. 탈북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며,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정주민과 동일한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하여 특별한 감독을 끝낼 때가 되었다.

## 무릎 꿇기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룯2:7-9)”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송에서는 가난을 증명하고 후원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함이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다. 빈곤을 포르노그래피를 소비하듯, 일상에서 사회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과 고난을 증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뜻 없이 그리고 말없이 복종하는 자에게만 자비를 베푼다. 매주 교회와 성당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연탄을 살 현금을 모으고, 거리에서는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보낼 수 있는 후원금 모금운동을 한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사회는 차이와 갈등을 극복할 수 없다. 모압에서 온 이방인 룯에게 보여준 보아스의 배려처럼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은 정당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와 성당의 현금도 필요하고, 자선단체의 모금과 방송광고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쓰임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가난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무릎 꿇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에서 다윗도 예수도 태어날 수 없다. 오히려 송파에서 봉천동에서 그리고 성북동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타살'만 늘어날 것이다.

국가에게 위탁된 공적 물리력(Power)은 폭력(Violence)과 다르다. 공적 물리력은 사회적 안전장치이자 등 뒤에서 떠오르는 지는 햇볕처럼 언제나 그곳에 있어야 하는 사회적 배경이다. 비록 지금은 공적권력을 위임받고, 공적폭력을 휘두르는 시대일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행정적 '고엘', 사회적 '고엘' 그리고 종교적 '고엘'이 회복되어야 할 시간이다. 더 많은 이들이 등지를 떠나 세상을 등지기 전에.

## 참고

김화순 (2019.11.28.) [기고]탈북민 특별 보호가 낳은 '특별 배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055015&code=990304#csidx1ef55cc349e5eec8161b83456daa82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055015&code=990304#csidx1ef55cc349e5eec8161b83456daa827)

연합뉴스 (2019.11.4.).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4160800004>

이상이 (2019.11.11.).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4873>

한겨레신문 (2019.12.6.). '성북구 네 모녀' 쓸쓸한 마지막...10일 무연고 장례 예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068296Y>